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한 한국 여론

Online Series

2020. 7. 30. | CO 20-17

이 상 신 (통일정책연구실장)

최근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위한 압박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거나, 실제로 최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미군을 철수하기로 결정한 바 있어서 주한미군의 감축 혹은 철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통일연구원의 KINU 통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대 다수의 한국 국민들은 방위비분담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는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안정되게 이어지고 있는 여론이어서 쉽사리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여론의 압박은 한국정부가 방위비분담금 협상과정에서 인상률의 폭을 좁히는 데 긍정적 작용을 할 것이다.

지난 7월 17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다. 이후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압박을 위해 미국이 주한미군을 부분적으로 감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통일연구원의 연례 여론조사인 KINU 통일의식조사의 자료를 통해 한국 국민이 바라보는 한미 방위비분담금의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려고 한다. KINU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96% 이상의 응답자들은 한미 방위비분담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되거나 오히려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제시한 13% 인상안과 미국 측의 50% 인상안을 비교했을 때도,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한국 정부의 인상안에 지지를 보내고 있었다.

주한미군 철수 압박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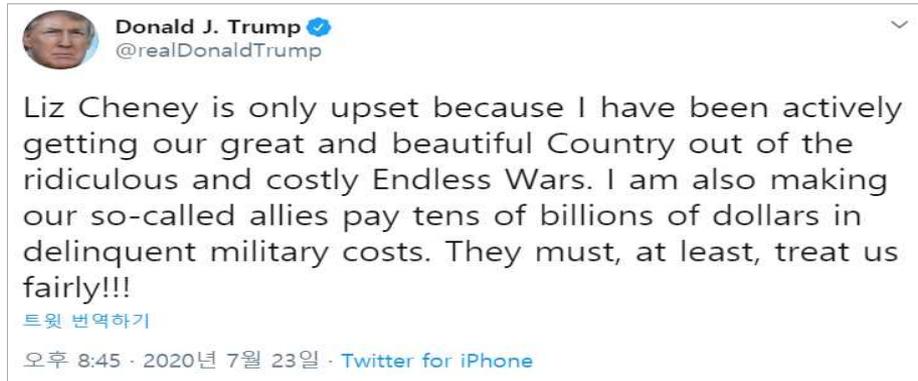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의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¹⁾ 이는 백악관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독일 및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 혹은 감축 방안을 보고하라고 국방부에 요청하였으며, 이에 국방부는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보고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독미군 감축을 결정한 바 있으며, 이 보도는 미국이 실제로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할 가능성에 대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이후 주한미군의 철수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모든 전구(戰區)의 모든 사령부에서 병력 최적화를 확실히 하기 위한 조정을 계속 살펴볼 것”이라고 해외주둔 미군의 재조정 가능성을 열어두었다.²⁾ 최근 북미 협상 과정을 폭로하는 책을 출판하여 논란이 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주한미군이 감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예측하기도 했다.³⁾

이렇게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이전부터 한국 및 일본 등의 국가는 충분히 방어 능력이 있으면서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수차례 발언한 바 있다. 또, 해외주둔 미군의 역할을 국제 안보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재정지출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치부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왔다.

-
- 1) “Trump Administration Weighs Troop Cut in South Korea,” *WSJ*, July 17, 2020, <<https://www.wsj.com/articles/trump-administration-weighs-troop-cut-in-south-korea-11595005050?mod=searchresults&page=2&pos=3>> (Accessed July 24, 2020).
 - 2) “주한미군 빼는 지시 없었다면서도 미군 최적화 거론한 미 국방,” 『연합뉴스』, 2020.7.22., <<https://news.v.daum.net/v/20200722003752131>> (검색일: 2020.7.24.).
 - 3) “美 볼턴, 주한미군 감축설에 ‘트럼프 재선되면 그럴 수도,’” 『파이낸셜 뉴스』, 2020.7.23., <<https://news.v.daum.net/v/20200723164633979>> (검색일: 2020.7.24.).

〈그림 1〉 트럼프 대통령의 7월 23일 트윗



7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트윗은 이러한 인식을 잘 보여준다(〈그림 1〉 참조). 공화당 하원의원 리즈 체이니(Liz Cheney)가 주한미군 감축을 반대하자 이를 비판하며 쓴 이 트윗에서, 트럼프는 미국의 동맹국들은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군사비용을 미국에 빚지고 있으며, 이러한 동맹관계는 미국에게 불공정하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제기되는 배경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변화나 새로운 안보 필요성이 제기된 것 때문이라기보다는, 11월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적인 유권자들을 결집하기 위한 선동적인 목적이 크다고 봐야 할 것이다.

실제로 주한미군이 감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7월 23일 미국의 상원을 통과한 2021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 수준을 2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게 되어 있고, 이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를 의회에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해놓았다. 이런 법안의 제동장치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감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없진 않으나, 현실화되기는 힘들다.

방위비분담금 증액에 대한 압도적인 반대 여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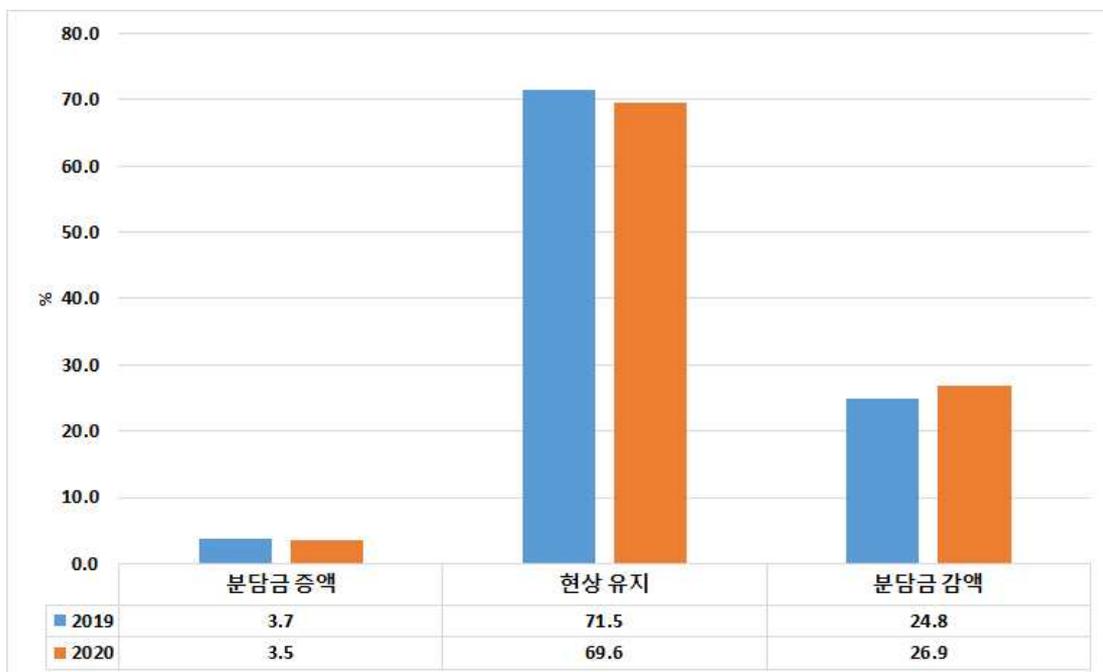
주한미군 감축 논란은 2019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이 부담하고 있던 기존의 방위비분담금 1조 389억 원(2019년 2월 기준)의 다섯 배가 넘는 5조 9,000억 원을 요구한 것이다.⁴⁾ 이후 한국과 미국 실무진

4) “불탄 방한 목적은 방위비, 5배 훌쩍 넘는 6조원 요구,” 『중앙일보』, 2019.7.30., <<https://news.joins.c>

은 방위비분담금 인상에 대한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현재 그 결과는 지지부진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군사적 보호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방위비분담금은 그 서비스에 대한 대가라고 이해하고 있다. 이런 시각은 한국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감축은 자연스럽고 정당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한국의 국민들은 방위비분담금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통일연구원의 KINU 통일의식조사는 2019년 9월과 2020년 5월 두 차례 진행하였다.⁵⁾ 여기서 한미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그 결과는 <그림 2>의 그래프와 같다.

<그림 2> 주한미군 분담금에 대한 의견



2019년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96.3%(현상유지 71.5% + 분담금 감액 24.8%)가 현 수준에서 방위비분담금을 유지하거나 감액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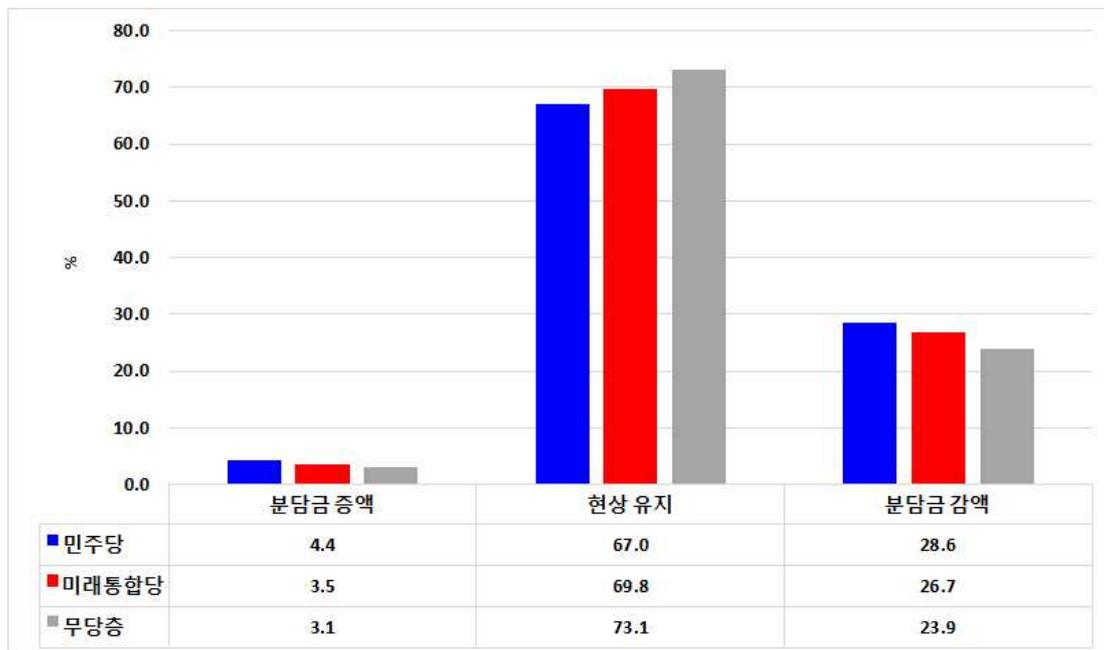
om/article/23539069> (검색일: 2020.7.28.).

5) 두 조사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2020년 조사는 5월 20일에서 6월 10일까지, 2019년 9월 17일에서 10월 8일까지 진행되었다. 두 조사 모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이다.

고 답한 비율은 3.7%에 불과했다. 2020년 조사에서도 거의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현상유지 혹은 감액이라고 답한 비율이 96.5%, 증액을 선호한 비율은 3.5%였다.

지지하는 정당을 기준으로 응답자들을 나누어 비교해 보아도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림 3>의 그래프에서 보듯,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보수적인 미래통합당 지지자들 또한 현상 유지 혹은 감액 의견이 96.6%에 달했으며, 이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95.6%보다 오히려 약간 높은 편이었다. 무당층 응답자들의 경우도 96.9%로, 전혀 차이가 없는 수준이었다.

<그림 3> 지지 정당별 주한미군 분담금 여론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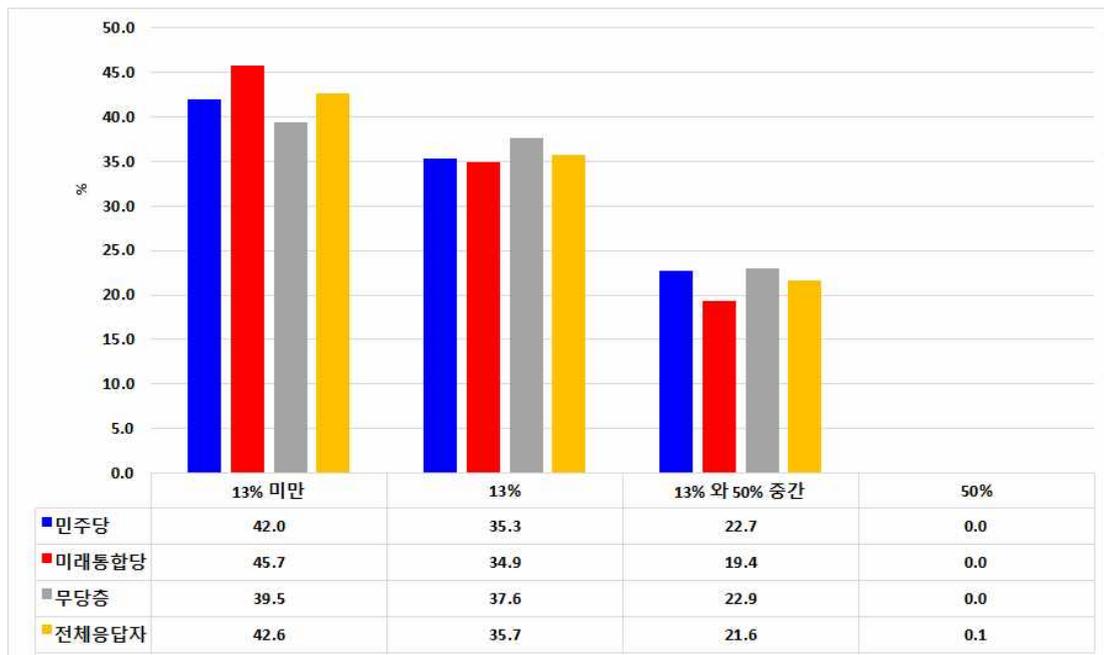
즉, 지지 정당에 상관없이, 한국인들 절대다수는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증액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또 이런 여론은 남북관계 경색이나 코로나19 사태 같은 외적 요인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2020년 조사와 2019년 조사결과가 거의 같다는 것은, 2019년의 첫 조사결과가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압력에 대한 일시적인 흥분 때문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이러한 여론의 방향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2020년 KINU 통일의식조사에서는 위의 문항과 더불어, 방위비분담금의 적정 인상률에

대한 의견을 묻는 신규 문항이 포함되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현행보다 13% 인상하는 안을, 미국 정부는 50% 인상안을 제시하며 협상하고 있는데⁶⁾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다. 이 문항은 ① 13% 미만, ② 13%, ③ 13%와 50%의 중간 정도, ④ 50%, ⑤ 51% 이상의 다섯 가지 답지를 제시하고, 이 중 어느 수준에서 방위비분담금의 인상률을 정해야 하는 가를 물었다.

전체 응답자 중 인상률이 51%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으며, 50%를 선택한 사람은 단 한 명이였다. 가장 많은 응답자 비율은 13% 미만을 선택한 42.6%였고, 한국 정부의 협상안인 13%를 찬성한 비율은 35.7%, 그리고 한미 간의 절충안인 13%와 50% 사이를 택한 사람은 21.6%였다.

<그림 4>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에 대한 여론



<그림 4>의 그래프에서는 방위비분담금의 적정 인상률에 대한 여론을 지지 정당별로 나누고 이를 전체 응답자 반응과 비교하여 표시하였다. 13% 미만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6) “美 방위비 ‘50% 인상’ 요구하며 ‘너무 내렸다’…韓 ‘의미 없어,’” 『연합뉴스』, 2020.5.8., <<https://www.yna.co.kr/view/AKR20200508057200504>> (검색일: 2020.7.24.).

높은 것은 미래통합당 지지자들로, 45.7%였다. 이에 비해 민주당 지지자들과 무당층은 각각 42%, 39.5%로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전체적으로 13% 미만 혹은 13%를 택한 응답자 비율은 통합당에서 80.6%, 민주당 77.3%, 무당층 77.1%였다. 통합당 지지자들이 오히려 더 낮은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을 선호하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는 아니었다. 보수정당이 안보를 강조하면서 재정건전성도 중요한 가치로 내세운다는 것을 고려하면, 통합당 지지자들의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태도를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KINU 통일외식조사 결과는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는 매우 강력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여론은 지난 9개월 동안 거의 변화하지 않았으며, 지지 정당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제시할 수 있는 양보의 폭은 매우 좁다. 만약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보다 지나치게 큰 폭으로 방위비분담금이 인상될 경우 야당뿐 아니라 여당 지지자 및 무당층에서도 심각한 반발이 나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KINU 2020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